

국힘 '현역 컷오프' 이번주 결정

오늘부터 지역구 의원 여론조사 교체지수 산출 40% 차지

29일~다음달 3일 후보자 공모

국민의힘이 22일부터 4·10 총선에서 자기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고 당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각 지역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조사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조사는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질서 있는 세대교체' 기조 아래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현역 교체지수'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어도 20%, 면접 10% 등 합산 평가)가 하위 10%에 들면 컷오프되는 것이다.

교체지수가 하위 10%부터 30% 사이에 들어가면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잔뜩 긴장하

는 모습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주말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02' 또는 '07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기, 조사 종료 안내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끊지 말기 등 여론조사 대응 요령 홍보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해 추가 15% 감산이 적용되는 만큼, 여론조사에서 최다치의 결과를 끌어내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금급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野 4당 "尹, 강성희 강제퇴장 사과하라"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 공동발의·운영위 소집 요구서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주 방문 행사에서 일어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을 연결 고리로 대어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이번 일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우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은 강 의원에 대통령과 약속한 뒤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가 될까 퇴장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짜리 전체영상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국민 청각 테스트를 하더니 이제는 국민 시각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장에 해당 영상을 들고는 "대통령이 강 의원을 악수한 뒤 한참 멀어지고 나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내고 있다"며 "경호상 위해 요소로 판단한 것은 결국 강 의원의 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는 신변 경호가 아닌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장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장에 있었던 윤준병 의원은 "강 의원은 대통령 앞에선 조금 조용히 국경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며 "멀어지자 조금 큰소리로 했다"며 "그러자마자 경호원들이 뚱쳐서 강 의원의 입을 막기 시작했고 사지를 들고 나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오직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에 공조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존올지타워에서 열린 '함께하는 시의 미래' 공공부문 초거대 시활용 추진 현장간담회에서 더존비즈온의 시전주기 지원 플랫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화취재단)

민주 "3선 이상·올드보이·586 감점 없다"

공관위원장 "성범죄·음주운전 등 5대 혐오범죄 중심 심사"

더불어민주당 입법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21일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그리고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분들 가운데는 당과 나라를 위해 출마를 해야 할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아 586은 안 된다, 3선 이상은 안 된다, 올드보이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다"며 "그분들을 차별하는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이 술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 어떨겠느냐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검증위에서 651명 중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극히 작은 포션이다. 대부분은 그냥 공관위로 넘어갔다"며 "실질적 심사는 내가 한다. 계파에 관계 없이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공관위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줄 작정"이라며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중요 발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상황"이라며 "공관위가 심사해서 컷오프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험대 오른 '한동훈 리더십'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국민 눈높이 해법 고심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자신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야당의 공세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품백 논란만큼은 민심이 더 가까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모수를 찾기 위한 한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자칫 당정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총선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숙제를 받아낸 셈이다.

21일 명품백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한 위원장이 영입했거나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경을 비대위원은 최근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총선 영입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기뻐한 '함정 몰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이 격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보조를 맞췄다.

또 김경을 비대위원 등의 김 여사 사과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명품백 논란의 본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할 여론 주류의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종전과는 달라진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총선 정국 돌파를 위해 '명품백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위원장 취임 후 '대권 잠룡'으로서 개인 지지율은 올랐으나 당 지지율은 30% 중반대를 담보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거론되는 것 역시 한 위원장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끌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김희재, 의대·간호대 설립 등 선거 공약 발표

여수을 예비후보

김희재(여수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여수시 용천 메가박스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희재 예비후보는 "여수시민들과 함께 하나된 여수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7대 대표 공약으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완공 ▲KTX 전라선 고속화·SRT 전라선 증편 추진 ▲국가산단



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특별법 제정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 설립 ▲국가군형발전청 설립 ▲국기군형발전청 추진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구축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전 법률위원장, 전 원내대표 등을 지냈고 국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